



광주 사상최대 국제회의...G20 재무차관 회의 어떻게

20개국서 150여명 참석 환경정비·안전점검 '만전'

G20 정상회의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에 다음달 4일부터 1박2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재무차관회의에는 20개국의 재무차관은 물론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중 최대 규모여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내달 4일부터 2일간...실사팀 점검 마쳐 회의 참가자 광주투어, 전시·음악회도

이번 회의에서 설정된 의제는 경우 'G20 재무차관회의', 인천 '사전교섭대표회의'를 거쳐 확정된 뒤 서울에서 11월 11일~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최희남 G20 준비위원회 총괄국장 등 10여 명의 실무진이 재무차관회의 개최장소인 무등파크호텔을 찾아 대연회장과 행사장 주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도시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집중정비기간으로 정하고 회의장·숙소 주변 환경정비, 위생점검, 사전합동안전점검 등에 나섰다. 회의 기간에는 참가자 편의 제공 및 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회의장 및 숙소 주변, 광주공항~숙소~회의장 이동구간

을 중점정비할 방침이다. 회의장인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파크호텔 주변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청소 및 불법광고물 정비 ▲숙소·음식점 위생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관리 사전 합동점검 등이 시작됐다. 또 광주시는 G20 회의 개최를 앞두고 주요 회의장 진입로에 현수막을 걸고 광주공항 등에 꽃밭을 설치하는 등 개최도시로서의 분위기도 돋우고, 셔틀버스 운영 및 외국어 자원봉사자 및 안내요원 배치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를 알리기 위해 회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포함한 광주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G20 회의 성공기원 미술전시회', 광주시립교향악단은 'G20 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음

악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는 국가원수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6시 환영 리셉션과 만찬으로 시작돼 다음날 오후 4시 폐막까지 총 22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G20(Group 20)은 20개국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19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초청국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추가된다. 고정 초청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아프리카연합(AU)의장국 말라위, 아프리카개발과 트너십(NEPAD) 의장국 에티오피아, 아세안(ASEAN) 의장국 베트남이 참가할 예정이다. UN(국제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7~10개 국제기구도 초청 대상이다. 대표단, 외신기자 등을 합쳐 모두 1만5000명 정도가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준비 인력은 경호 분야를 제외하고도 3500여명에 달한다. G20 준비위원회가 100여 명, 행사 진행요원 500명, 서울시의 자원봉사자 3000명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각국의 각료들이 광주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착실히 준비해온 광양은 예외다”

정부 경제자유구역 축소 움직임...광양만권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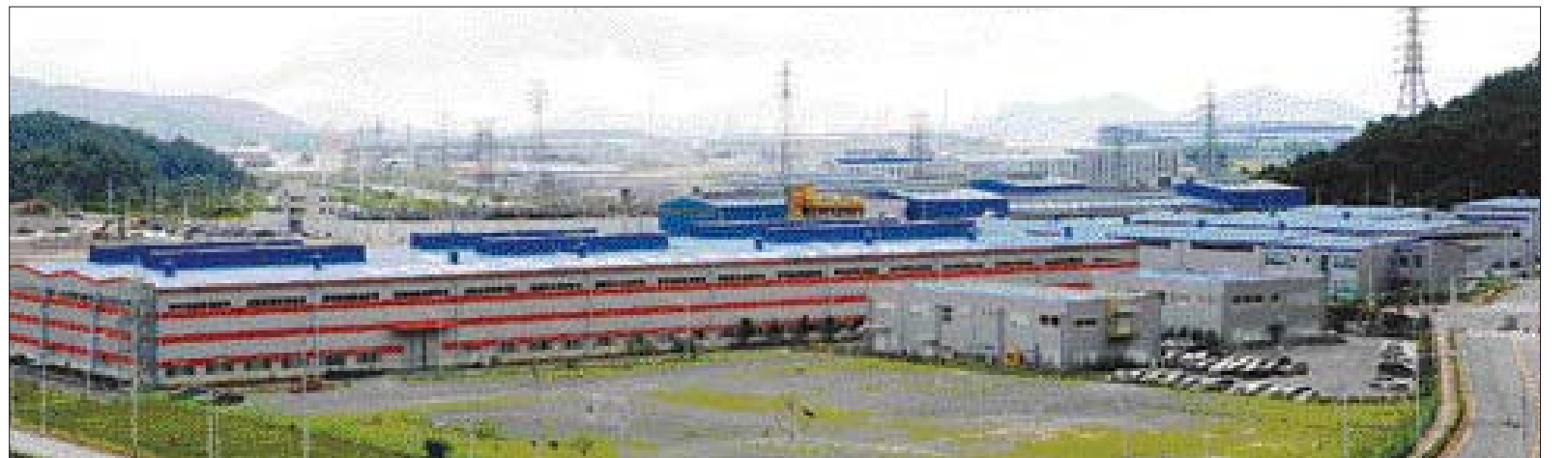
“지원 늘려 개발계획 앞당겨 추진해야”

정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경제자유구역을 비롯,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김영화 제2차관이 직접 나서 “개발이 부진하다고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지역민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구조조정의 ‘베스’를 들이댄 것은, 외자유치가 부진한데다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산권 행사만 제한되고 있다는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지역 경제계와 주민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

우 정부가 내세운 구조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확실적인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닌,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자 유치 지지부진?>=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7월말까지 투자 유치 실적은 모두 92개 기업 72억8300만달러다. 외국 투자기업은 33개사(2620만달러)로, 국내기업은 59개사(4663만달러)보다 적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입장이다. 광양항에 대한 국내외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70개 업체를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기업의 78.7%를 차지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 더디 재산권 침해?>=지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광양경제청의 지리지정 해제 검토 대상지는 ▲광양 성황 배후단지(1.02km) ▲순천 선월 배후단지(3.71km) ▲광양 용강 배후단지(1.88km) ▲순천·광양 신대·덕례 배후단지(13.76km) ▲광양 포스코터미널(0.96km) ▲하동 덕천배후단지(2.65km) ▲여수공항(2.31km) 등 7개 단위 지구다. 지경부의 재검토 대상지는 광양만권 전체 22개 단지(95.52km)의 27.5%다. 이들 대상지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칫 주민 재산권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아직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구다. 결국 사업 계획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억지를 부리는 식이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업성 없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반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초 1·2·3단지 개발 등이 이뤄지면 12만 인구를 수용할만한 배후단지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 오히려 용강, 신대·덕례, 덕천 배후단지는 현재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개발계획(3단계)보다 앞당겨 추진돼야 한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56% 이상을 생산하는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져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조정대상지구 평가회의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의 사업타당성 ▲개발가능성 ▲항후 개발로드맵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일부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산단 배후단지들로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데다 사업성과 수요가 충분해 해당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관리 중인 올촌1산단 전경.

김태호 총리 후보자 24일부터 청문회

7개부처 장관·국세청장은 16일부터 일주일간

여야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여야는 또 이재오 특임장관 등 7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상임위원

로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8·8 개각'에 따른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는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선임했고, 특위 위원은 한나라당 7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하되,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27일로 순연했으며, 이날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 결과보고, 정보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 선출 등을 일괄 처리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이달내 사퇴할 듯

향소심 재판서 “선고일 이전에 공직생활 정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언 광주시 서구청장이 사퇴를 결심했다. 9일 전주언 서구청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장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사건 향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고일인 9월 2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청장은 변호인은 “전주언 서구청장이 스스로 ‘선고일 이전에 청장직을 사퇴함으로써 공직생활을 정리하겠다’고 말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이 9월 30일까지 청장직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제 35조)에 따라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구청장이 뽑히게 된다. 그러나 9월 30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 27일 재선거에서 새 서구청장을 뽑게 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실에서 서구청 건물을 통해 승진대상자 2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고(뇌물수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는 등 관련선거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 청장은 지난달 광주지법으로부터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기존 3.0kw 이하 설비용량 추가설치 가능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2.0kw~3.0kw 기준
302만원~740만원 절감

02-268-5118 / 011-9435-0441

아이엘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불꽃있는 서비스 (500석 침베)

0621671-1199